

잇따른 학생자살, 카이스트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

▶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안 민 석 국회의원 등
- 사 회 : 안 진 결 참여연대 민생팀장
- 발 제 : 이 광 철 민변 변호사
- 토 론 : 안 민 석 국회의원

이 승 섭 카이스트 학생처장

구 들 래 한겨레 기자 (카이스트 졸업생)

이 병 찬 카이스트 총학생회 간부

김 진 수 교과부 과기인재양성과장

- 일시 : 2011년 4월 13일 (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안민석 / 참여연대

1. 최근의 KAIST 사태 요약

- 올 해 들어 한국과학기술원 (이하 KAIST) 소속 학부생 가운데 무려 네 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음
- 올 1. 8. 1학년 조모(19)씨가 교내에서 목숨을 끊었고, 3. 20.에는 2학년생 김모(19)씨가 경기 수원시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같은 달 29일 카이스트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장모(25)씨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숨졌고, 그리고 4. 7. 오후 1시20분께 카이스트 휴학생 박모(18)군이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음
- 그리고 KAIST 학부생들은 이러한 극단적 선택의 근저에는 KAIST 총장인 서남표의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럼에도 서남표 총장은 4. 4. KAIST 홈페이지에 올린 'KAIST 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여 마치 학부생들의 죽음이 그들 스스로의 정신적인 문제인 것처럼 폄하함
- 이 발언이 있은 후 단 사흘 만에 또 한명의 KAIST 학부생 박모(18)군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었고, 이 점에서 이 발언은 큰 충격을 주었음
- KAIST 교수협의회는 4. 11. 비상총회를 열고 "지금 KAIST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획일성과 일방통행은 창의성의 적"이라며 서남표 총장이 추진한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

- 또한 KAIST 학부총학생회도 서남표 총장의 개혁을 '실패한 개혁'으로 규정하며 '무한경쟁' 정책의 철폐를 요구.
- 한편 서남표 총장은 4. 12.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대학 운영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함
- 4. 15. KAIST 이사회가 열릴 예정
- 한편, 서남표 총장은 문제가 된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폐지와 영어수업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는 폐지에서 기준학점 완화 등으로 입장 번복)

2.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서남표 총장의 제반 정책들의 문제점

가.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의 내용과 실태

- KAIST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지만 대학 측은 2007년부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전 두 학기 학점이 기준(평점평균 3.0)에 미달할 경우 0.01점당 6만원 가량을 내도록 하는 사실상 징벌적 등록금제도를 도입.
- 징벌적 차등등록금 제도의 근거는 KAIST의 학칙 제87조 제2항, 납입금 징수규정 제4조 제2항으로 보임(학사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4년(8학기)간 정규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학업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 경향신문 2011. 3. 10.자에 소개된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음

KAIST 등록금 본인 부담금 기준 (자료: KAIST)

학점	본인 부담금
평점 3.0 이상	→ 수업료 면제
평점 2.0~3.0 미만	→ 0.01점당 약 6만원씩 본인 부담
평점 2.0 미만	→ 수업료 600만원, 기성회비 150만원 전액 부담

*평점 3.0 미만으로 처음 내려갔을 때는 3만원(0.01점당 약 6만원의 50%)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산정
 *평점 3.0 미만으로 2번 연속 내려갔을 때는 4만5000원(0.01점당 약 6만원의 75%)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산정
 *평점 3.0 미만으로 3회 연속 내려갔을 때는 6만원(0.01점당 약 6만원의 100%)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산정

- 이에 따라 2008년 등록금을 낸 학생은 302명에서 2009년 611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짐
- KAIST은 본래 무학년 · 무학과 제도를 기본원칙으로 함
- 학문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다양한 분야를 접함으로써 창의성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임
- 그러나 징벌적 차등등록금제 실시 이후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할 때 ‘학점에 유리한가’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고, 여기서 자신의 관심사는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징벌적 차등등록금제 도입 이후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함 귀결
-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한다는 무학년·무학과의 기본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음
- 또한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
- KAIST에서 동아리 활동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기계발로 이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임
- 실례로 카이스트 해커동아리 ‘쿠스’에서 활약했던 졸업생들이 현재는 인젠, 해커스랩, A3시큐리티컨설팅 등에서 손꼽히는 보안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이러한 동아리 활동이 학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함
- 결국 징벌적 차등등록금제 도입 이후 동아리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필연적 귀결
- 여기에다 학점의 부여에 있어서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연

차초과 제도와 재수강 제한제도를 두고 있고, 여기에 사실상 계절학기조차 없고 보면 결국 이러한 여러 제도의 결합으로 인하여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는 학생들을 극단적인 경쟁정책의 한 복판으로 떠밀고 있는 기능 수행

나.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경쟁위주 정책들의 위법성

1) 첫째,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의 KAIST의 설립목적에 위배

-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의 KAIST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는 점
- 첫째는, 이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가 기타 연차초과 제도와 재수강 제한제도 등 다른 정책들과 결합되어 KAIST 학부생들을 더욱 극단적인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그 결과 학부생에게 더욱 큰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왔다는 것임
- 이런 속에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이른바 차등등록금제도의 취지는 사실상의 KAIST의 등록금 징수를 통한 재원의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임
- 차등적 등록금제도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과학영재의 산실이라는 KAIST의 설립취지와 부합하려면 절대평가제와 결합하여 운영하든가, 그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상대평가제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둘째는 이런 구조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KAIST의 학부생 누구나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평가"라는 점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등록금 폭탄을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점임
- 즉 학내의 학부생 다수에게 많게는 8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의 압박을 가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은 나아가 KAIST 학부생들로 하여금 과중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한 요인이 된 것임

- 그 결과 지금 KAIST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는 커녕 눈앞의 학점경쟁에 급급한 적자생존의 극단적인 경쟁만이 횡행하고 있을 뿐임
- 앞서 본,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

2)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하는 것의 위법성

- 이 제도는 “학업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KAIST의 학칙 제87조 제2항, 납입금 징수규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이 그 상위법인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9조(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애초 KAIST의 설립취지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과학영재로 양성하자는 것이었음
- 과거 이른바 가난한 수재로 하여금 등록금 등 경제적인 문제에 구애됨이 없이 공부에만 전념하게끔 하여 과학 영재를 양성하자고 하여 만든 기관이 KAIST인 것이고, KAIST가 2007년 징벌적 차등등록금 제도 도입 이전까지 학부생들에게 등록금 등 일체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나아가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정책적 결단의 구체적 결과임
- KAIST의 입학할 지망하는 수험생들 역시 바로 이러한 KAIST의 등록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KAIST 입학할 희망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러한 정책적 결단과 그에 터잡은 그간의 등록금 면제라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위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9조인 것임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위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9조의 규정은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고, 나아가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수업료 전액을 징벌적으로 납부하게끔 하는 것은 위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나아가 그간의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관례에 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한 것 또한 신뢰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다.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의 정책적 합목적성

- 서남표 총장이 도입하고 시행한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경쟁위주의 제반 정책들은 일응 KAIST 학생들에 경쟁을 촉진시켜 애초의 KAIST의 도입 취지인 과학영재의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선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정책적 합목적성에 의문이 있음
- 첫째, 이러한 제도들이 KAIST의 설립과 존재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임
- 학점위주의 수강신청, 복수전공 선택의 극감추세, 동아리 활동의 저조 현상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둘째,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는 결과로 지금과 같은 무려 4명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갔다는 것은 이 제도가 가지는 결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 요컨대,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경쟁위주 정책들은 KAIST의 설립취지와 존재이유에 역행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의 전제이자 궁극적 지향점인 생명의 가치마저 경시한다는 점에서 공익의 헌법적 표현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 10조)에 반한다고 할 것임

3. 결론

- KAIST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이 곳은 과학영재의 배출을 통한 과학입국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는 곳임
- 그런데 서남표 총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침으로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로

상징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으로써,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과학영재로 성장해야 할 인재들로 하여금 자율과 창의는 고사하고 당장 눈앞의 학점 경쟁으로 내모는 한편, 학생들로 하여금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저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것임

- 그럼에도 서남표 총장은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돌리는 언동을 서슴지 않음
- 결론적으로 서남표 총장이 입안하고 시행하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여러 경쟁위주의 정책들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와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9조에 위배되는 한편, KAIST의 설립취지와 존재이유에 역행하면서 KAIST의 학부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법 · 부당한 제도라고 할 것임

1) 카이스트의 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 서남표 총장 취임 이후(2006년 7월)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강요
 - 징벌적 등록금제 : 평점 3.0미만으로는 0.01점마다 6만원씩 수업료 납입. 8학기를 넘겨 재학중인 학생은 연간 1,500만원 납부(학부만 해당)
 - 모든 과목 100% 영어강의 실시 ⇒ 2010년 기준 914개 개설과목 중 848개 과목 영어강의 진행(한국사, 한국문학, 논술, 체육 등 특수한 경우 제외)
- 독단과 전횡으로 KAIST에 불만과 불신 팽배
 - 테뉴어 심사 강화 : 2010년까지 148명중 24%가 탈락 ⇒ 내부적으로는 총장의 판단에 따른 임의 평가가 좌우하다는 비판 직면
 - 특훈교수제 도입 :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을 학내에 영입하는 수단 활용
 - 학교 정관에 명시된 교수평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음.
- 대통령 신임 '한 몸'에 승승장구
 -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신성장동력추진 기획단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 역임
 - 대통령 및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며, 소관부처인 교과부는 무시
 - 대통령이 직접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할 정도로 친분 과시, 이 자리에서 온라인 전기 자동차 시연 이후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하버 추경예산 500억 이례적 확보
 - 서남표 총장은 탁월한 과학자이긴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대학운영에 관한 철학은 매우 빈곤하며, 이러한 교육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된 '경쟁'과 '효율',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임.
- 카이스트 잇따른 자살에도 '요지부동'
 - 3번째 학생 자살 이후 학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자살의 원인이 마치 학생들의 정신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양 묘사
 - 4번째 학생 자살 이후 조국 교수 등에 의해 '사퇴'가 최초 거론되자 "그 사람의 생

각일뿐”이라고 일축

- 4월 8일 학생 간담회장에 언론이 취재하면 만나가겠다고 ‘억지’, 언론이 철수한 이후에도 학생들이 계획했던 인터넷 생중계 중단 요구
 - 4월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하여 질타를 받은 이후 국회에서 서남표 총장이 언급했던 학교운영개선방안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백지화됨.
- ⇒ 15일 카이스트 이사회를 지켜본 후 서총장의 신변에 변화가 없을 경우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횡’과 ‘독선’으로 얼룩진 카이스트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올해 2월 7일부터 10여일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 종합감사 실시 결과 총 28건 적발
 - 신분상 조치 :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 경고 147명, 주의 22명, 별도조치 1명
 - 행정상 조치 : 기관경고 1건, 고발 3건, 개선 1건, 시정 1건, 통보 8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9건(6억 4천 8백여만원)
- 이 중에서 특히 서남표 총장은 ① 이사에 대한 명예 박사학위 수여 및 초빙교수 임용 부적정 ② 신입교원 채용절차 부적정 ③ 교원 신규채용 절차 미준수 ④ 공사 계약 업무 처리 부당 등 4건에 걸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 서남표 총장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직접 조치할 수가 없고 이같은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에서는 ‘별도 조치’로 표기
- 서남표 총장이 적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원의 선임 등 기관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이사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가 없지만 이사 4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이사 3명에게 초빙교수를 임용하였고, 초빙교수의 역할인 학기당 1학점 이상 인정되는 강의 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총장 자문위원이나 특강 등에 활용
 -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4조,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22조,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규정 제24조 등 위반
 - ⇒ 지난해 7월 2일 열린 이사회에서 차기 총장 후보 5명 중 재적인원(19명)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서 연임에 성공했음. 이런 점을 보면 일부 이사들에게 부당하게 명예박사학위나 초빙교수를 남발한 것은 결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문제로 보여짐.

- 또한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가 신입 교원 채용시 학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추천여부를 결정함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26조,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인사운영요령 제6조 및 제15조 등 위반
- 공사규모가 55억이 넘는 일반경쟁입찰 대상공사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기부/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시행했으며, 이와 같은 건에 입찰 참가 3개 업체의 입찰 담합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계약 체결
⇒ 한국과학기술원 회계규정 제69조제2항 및 제78조, 한국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0조 및 제51조제1항 및 제2항 등 위반
- 이밖에 카이스트는 출장비 중복수령(5천 4백여만원), 명예교수 강의수당 부당 지급(1억 8천 4백만원), 직원채용시 출신대학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여 출신대학에 따른 차등 점수 부여,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이중 일부를 교수가 사적 사용(총 6천 8백 5십여만원), 교수 연구수당 부당 수령(29명 / 7천여만원), 연구용역사업에서 당초 계약서에 계상된 인건비를 증액하여 2천여만원 인건비 초과 지급, 국내소재 외국 고등학교 졸업 내국인에게 학사과정 입학자격 부여(18명 특별전형 합격자중 4명이 교직원 자녀), 총장 사학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 부적정 등 총 28건이 적발됨.
- 카이스트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최고의 대학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카이스트 종합감사결과는 그 배경을 따지기 전에 부끄러운 모습 그 자체임. 교수가 학생들의 연구 인건비를 빼돌려 쓰고, 교직원 자녀를 특혜 입학시키고, 출신 대학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카이스트의 현실은 차마 입에 꺼내기도 두려울 정도.
- 특히, 총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이사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 이사회가 서 총장의 거취문제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카이스트 이사회에 금번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국민적 분노와 실망을 반영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임. 또한 이사회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 총장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 초빙교수를 비롯하여 각종 불법적인 혜택을 받은 이사진의 자격문제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

3) 징벌적 등록금, 약이 아닌 독

- 카이스트 징벌적 등록금의 근거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9조 :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대통령령) ⇒ 한국과학기술원법에는 수업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한국과학기술원 학칙 제87조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사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4년(8학기)간 수업료를 면제한다. 다만, 학업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2006. 12. 29. 정기 이사회에서 학칙 개정)

○ 징벌적 등록금의 개요

- 2006년 12월 학칙 개정 → 2007년 이후 신입생부터 2007년 1,2학기 성적을 합산한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적용 → 2009년 2,3학년 적용 → 2010년 2,3,4학년 적용
- 대학원생은 징벌적 등록금 미적용(원래부터 수업료를 납입하고 있었음)
- 학부생의 경우 평점 3.0 미만일 경우 0.01점당 6만원씩 수업료 부과. 평점 2.0이하는 수업료 전액 납부(학기당 600만원)
- 연차 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는 이수 학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업료 전액 징수

년도	학기	납부 학생수	금액
2008	봄	206	453,660
	가을	96	225,660
소계		302	679,320
2009	봄	311	688,851
	가을	300	720,657
소계		611	1,409,508
2010	봄	601	1,578,213
	가을	405	980,130
소계		1,006	2,558,343
합계		1,919	4,647,171

○ 성적에 따른 차등 부과 수업료는 2008년에 6억 8천여만원, 2009년에 14억 1천여만원, 2010년에 25억 6천여만원으로 불과 2년만에 3.8배 가량 증가. 2007년 입학생 수가 776명, 2008년 입학생수가 860명, 2009년은 1,045명이었음. 2008년에 2학년이 되는 2007년 입학생에 비해 2010년에 2,3,4학년이 되는 2009년까지의 입학생 숫자는 2,681명이었음.

○ 결국 차등 부과(징벌적) 수업료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학생은 2년만에 3.4배 가량 증가한데 비해, 차등 부과 수업료 징수 금액은 3.8배 증가 ⇒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어 징수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 보다는 오히려 징수금액만 늘어남.

- 또한, 차등부과(징벌적) 수업료는 2008년에는 학생 1인으로부터 한 학기당 평균 224만 9천원가량 징수했다면, 2010년에는 학생 1인으로부터 한 학기당 평균 254만 3천원을 징수한 셈. 이는 결국 학점 3.0미만 학생들의 성적이 더욱 나빠졌다는 것으로서 가혹한 경쟁이 학생들을 자극하여 학업성취도가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악화
- 한편, 성적에 따른 차등부과 수업료 및 연차초과 수업료 수입은 2010년까지 74억 6천 만원이었고 2011년까지 116억원가량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
- 이 예산은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을 위한 메디컬센터 건설 및 운영비로 사용되어 왔음.
-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준 징벌적 수업료 수입을 가지고 메디컬 센터를 짓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아이러니이며, “병주고 약주는 격”으로 볼 수 있음.

<2007~2010년 학점분포 현황>

연도	구분	4.0~4.3		3.5~3.99		3.0~3.49		2.5~2.99		2.0~2.49		2.0미만		합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07	학부	313	8.9%	1125	31.9%	1233	34.9%	547	15.5%	210	5.9%	102	2.9%	3530	100.0%
	대학원	738	19.2%	1703	44.4%	1114	29.0%	220	5.7%	44	1.1%	18	0.5%	3837	100.0%
2008	학부	325	8.6%	1327	34.9%	1268	33.4%	554	14.6%	216	5.7%	109	2.9%	3799	100.0%
	대학원	770	20.0%	1736	45.1%	1097	28.5%	195	5.1%	43	1.1%	9	0.2%	3850	100.0%
2009	학부	327	8.0%	1342	32.6%	1376	33.5%	679	16.5%	246	6.0%	141	3.4%	4111	100.0%
	대학원	716	20.6%	1424	41.0%	1043	30.0%	212	6.1%	53	1.5%	23	0.7%	3471	100.0%
2010	학부	338	7.9%	1422	33.4%	1443	33.9%	682	16.0%	249	5.8%	128	3.0%	4262	100.0%
	대학원	706	19.3%	1624	44.3%	1102	30.1%	187	5.1%	30	0.8%	17	0.5%	3666	100.0%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점 분포도를 살펴보면 징벌적 수업료 대상이 되는 학부생의 경우 신입생만 대상에 해당되는 2007년에는 2.5이상 3.0미만 학생 비중이 15.5%에서 전학년 학생이 모두 적용되는 2010년에는 16.0%로 오히려 증가했음.
- 2007년에 비해 2.0이상 2.5미만 학생 비중은 5.9%에서 5.8로 약간 줄었지만 2.0미만 학생은 2.9%에서 3.0%로 약간 늘었음. 3학년까지 징벌적 수업료 대상이 되는 2009년에는

2.5이상 3.0미만이 16.5%, 2.0미만은 3.4%로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성적이 나빠진 것으로 보임. 한편 최상위 클래스인 4.0이상 만점까지는 2007년 8.9%에서 2010년 7.9%로 그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음.

- 치열한 학점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학생들을 학점의 노예로 삼았을 뿐 학생들의 학점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07~2011 휴학 및 자퇴 학생 현황>

연도별	학부/대학원	인원현황			
		입학	재적	휴학	자퇴
2007봄	학부	721	3,331	370	13
	대학원	1,312	4,605	166	53
2007가을	학부	55	3,224	384	11
	대학원	295	4,517	165	34
2008봄	학부	801	3,586	479	43(19)
	대학원	1,238	4,631	161	41
2008가을	학부	59	3,452	421	9
	대학원	359	4,548	155	38
2009봄	학부	929	4,463	620	48(26)
	대학원	1,409	5,336	246	44
2009가을	학부	116	4,390	624	10
	대학원	399	5,271	241	30
2010봄	학부	926	4,690	753	43(28)
	대학원	1,588	5,462	287	40
2010가을	학부	111	4,586	718	26
	대학원	542	5,334	243	30
2011봄	학부	892	3,959	864	21(14)
	대학원	1,638	5,390	321	9

- 한편, 카이스트 학생들의 휴학 및 자퇴도 크게 늘었음. 2007년 봄 학부 재적 학생수는 3,331명이었으며 이중 370명이 휴학을 했음.(11.1%) 하지만 2011년 봄에는 3,959명의 재적 학생 중 864명이 휴학을 함(21.8%)으로써 무려 두 배나 증가함. 이같은 현상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터라서 징벌적 수업료와 영어강의 등으로 인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2007년 봄 : 3,331명/ 370명(11.1%) → 2008년 봄 : 3,586명 / 479명(13.4%) → 2009년 봄 : 4,463명 / 620명(13.9%) → 2010년 봄 : 4,690명 / 753명(16.1%) → 2011년 봄 : 3,959명 / 864명(21.8%)

- 특히, 징벌적 등록금의 대상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덜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원생들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무더기 자퇴현상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음. 대학

원생은 2007년 봄 4,605명의 재적 학생 중 166명이 휴학해 3.6%의 비율을 기록했고, 2011년 봄에는 5,390명의 재적 학생 중 321명이 휴학함(6.0%)으로써 학부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보임. 대학원생도 휴학생의 숫자가 늘긴 늘었지만 휴학생의 비중이 21.8%나 되는 학부생에 비하면 차이가 남.

※ 2007년 봄 : 4,605명/ 166명(3.6%) → 2008년 봄 : 4,631명 / 161명(3.5%) → 2009년 봄 : 5,336명 / 246명(4.6%) → 2010년 봄 : 5,462명 / 287명(5.3%) → 2011년 봄 : 5,390명 / 321명(6.0%)

- 서남표 총장은 자살한 학생들이 성적 및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연관이 적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자살한 4명의 학생중 2명은 징벌적 등록금 적용 대상이었으며, 한명은 간신히 징벌적 등록금을 넘길 정도의 평점이었음.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명의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했는데 모두 대학원생이었던 점에 비하면 올해 석 달만에 자살한 4명의 학생은 모두 학부생이었으며, 한 명을 제외하면 3명은 징벌적 등록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2학년생이었음.
- 또한 학업과 성적 스트레스가 직접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 부담으로 인해 친교를 맺기가 어렵고, 자연스러운 학생 문화가 발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자살을 촉발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나는 낙오자였다. 첫 학기 학점은 2.7이었다.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기 전 도서관에 자리를 맡았다.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은 도서관이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강의를 따라갈 수 없었다. 숙제를 겨우 했다. 그렇게 공부하고도 성적은 '평균'이라는 3.0이 되지 않았다. 여름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다시 올라갔을 때 매일 잠을 자지 못했다. 어느 월요일, 짐을 싸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어머니 앞에 서자 학교를 못 다니겠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 사흘이 지나자 어머니는 나를 버스 터미널에 데리고 갔다. 버스에 나를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어머니는 버스의 쾅무니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1992년이였다. 나는 KAIST 학부 1학년이였다. 스무 살이였다. 공부 외에는 할 게 없었고, 그것에서는 실패만 거듭하는 절망스런 스무 살이였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몸무게가 30% 이상 늘고, 그때 나이의 두 배가 되었다. 오랜만에 학교를 갔다. '자의'는 아니었다. 지시가 떨어졌다. 스무 살의 불행에 갇혀서 나는 어린 후배 4명이 연달아 자살한 사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학교는 깨끗해지고 높아졌다. 각종 행사가 열리던 운동장은 야구장으로 정비되고, '태울관'이 들어섰다. 태울관에는 동아리방이 집결해 있다. 동아리 방이 있던 가건물 자리는 주차장이 되었다. 재학시절 기숙사 방보다 자주 드나들었던 '상록회'(이름 정말 촌스럽다)는 거기에 없다. 총학생회에 물어보니 상록회 같은 사회과학 동아리는 두 개가 있다는데, 둘 다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도서관의 독서실 풍 열람실은 유리문으로 단장하고 탁자가 놓였다. 학생들은 두 권은 들 수 없는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한다. 남녀 나란히 앉은 애들은 커플일 것이다. 당시 도서관 자리로 커플임을 '커밍아웃'했다.

도서관 입구에는 '총장과의 대화' 의견을 모으는 자료가 붙어 있다. 간담회는 8일

저녁 개최되었다. “이렇게 카이스트가 세계 10위권 대학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적힌 밑에 ‘사망지수’라고 누가 써놓았다. 큰 글씨로 “살려주세요”도 적혀 있다. 총학생회를 방문한 10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과대표가 다 모이는 회의다. 11일, 12일 이틀간은 휴교를 하고 ‘사제간의 대화’를 갖는다.

총장과의 간담회, 담화문이 발표되었지만 학교의 뒤숭숭함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문제의 초점으로 부각된 차등등록금제는 폐지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것도 딱히 ‘원인’이랄 수 없다. 차등등록금 제도는 서남표 총장이 부임한 이듬해 2007년 시행되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총장의 개혁은 생활 곳곳까지 미친다. 논란 속의 제도로는 ‘영어 강의’도 있다. 놀라움으로 보도되었다가 이제는 ‘구문’이 된 ‘영어 강의’는 학생들의 현재다. 카이스트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한다. “예외가 있으면 그 수업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 한국어 강의를 예외가 되었다. 중국사도 동양철학도 일본어도 영어로 배운다. 영어강의에 대해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한다. “딱 한 번 한국어로 전공 강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 보강수업이어서 가능했다. (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혁명적이었다.”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학생은 “한 번도 영어 강의를 완전히 이해해본 적이 없다”는 글을 남겼다.

학생들 탄압도 공공연했다. 2008년에는 ‘연차 초과자는 학생 대표가 될 수 없다’는 학칙을 내세워 총학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다. 그해 연말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이스트의 개혁을 바라는 글을 올린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3학기제로 학기 변화(카이스트는 2월 강의를 시작한다), HRHR(high risk high return) 프로젝트 등의 학과 과정 외에도 연차초과시 등록금 납부, 재수강 학점 제한, 계절학기 폐지, 학생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식비 지급, 인턴십 장려 등 아주 소소한 일까지 여럿이다. 4월4일부터 일주일간 일인시위를 벌인 11학번 이준혁 학생은 제도 개혁의 특성을 이렇게 말한다. “독창성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100% 입학사정관제로 바꾸었다 했다. 그런데 창의성을 유

지하거나 찾아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학점 좋은 학생만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학보인 <카이스트신문> 기자는 당시 신문을 갖다주었다. 학생들은 2006년 개혁안에 대해서 집회를 가졌다. 일방적인 통보식의 개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인호 부총학생회장은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싸워왔다”고 한다.

총장의 개혁안에 학생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결코 돈 때문이 아니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하나다. 송석영 편집장은 “학생들이 예전부터 문제제기한 일을 조금만 들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인호 부총학생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과의 소통이다”고 말한다.

카이스트는 여전히 모를 곳이다. 게시판에서 ‘서남표 총장 파이팅!’이라는 글이 추천 53, 비추 43으로 막중막하다. 누군가는 이렇게 글을 올린다. “정말 노력했는데도 학점이 3.0이 안 되면 카이스트에 붙어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지껄입니다. 그런 글에 추천을 오십 개 썩이나 눌러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장짤’ (학점이 3.0이 되지 않아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하는 것은 학교 제도지만 ‘낙오자’ 취급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다. 5년의 개혁은 학생들이 경쟁을 몸으로 익히게 만들었다.

1992년에도 ‘경쟁’과 ‘낙오’를 잘 알고 있었다. 나랏돈으로 공부한다는 부채의식도 있었다. 징벌적 제도 없이도 그랬다. 오랜만에 전화한 94학번 후배는 “그때보다 더 심한 것 같다. 우리 때와 달리 퇴로가 없다”고 말한다. 나는 휴학을 한 차례 하고, 96년 가을 졸업을 했다. 백수 생활을 했고 어렵게 회사에 취직을 했다. 석사를 마친 한 친구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로 취직했다. 한 후배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른 대학 시험을 치렀다. 한 후배는 영상원에 진학했고, 한 친구는 가정주부가 되었다. 한 친구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한다고 했다. ‘퇴로’를 택한 한 후배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되었다. 스무살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사방이 꽉 막힌 곳에서 후배들이 파랗게 질려 있다.

1. KAIST 학부 총학생회 성명서 (4/11)

“우리는 더 이상 비극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이스트에 보라색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사개월간 네 명의 학우와 한 분의 스승이 스스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카이스트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모든 이는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혹자는 그들의 선택이 지극히 개인의 문제이기에 단지 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안타까운 선택으로 몰아간 그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서남표 총장님이 오신 이후로 카이스트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교육 개혁가’로 불리는 서남표 총장님께서서는 카이스트의 교육 정책을 바꾸었고, 우리는 지금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친구가 힘들어해도 과제 때문에 삼십분도 낼 수 없고, 오로지 높은 학점을 위해 학문 그 자체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새로운 시대를 열던 옛날의 과학도는 이 자리에 더는 없습니다. 지금 카이스트는 숨 죄어 오는 무한 경쟁에 등 떠밀려 하루하루 과제를 틀어막기에 바쁜 ‘톱니바퀴’를 짚어낼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를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하는 것을 참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비상학생총회에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고 뜻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의 꿈과 이상, 그리고 미래를 억누르지 못하게 세상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늦었습니다. 이미 네 명의 친구와 한 분의 스승이 우리 곁에 없고, 그것을 되돌릴 길은 없습니다. 2008년 총장님과의 대화가 남긴 변화에 대한 미련과 기대는 더 이상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장장 오년에 걸친 우리의 기대는 그들의 부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서남표 총장님께서 부고 직후 4월 7일의 차등수업료 폐지로 스스로 인정하였듯, 잘못된 개혁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과 이상이지 눈물 속에 학업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의 대학생활은 4년뿐이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후배들이 이 자리를 거쳐 갈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새로운 카이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뒤늦게나마 배웠고,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서남표 총장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우들은 나약한 이들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만든 틀에 맞춰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학문의 길을 이어나가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카이스트는 당신이 설계한 기계의 톱니바퀴를 뽑아내는 공장이 아니라, 한국과학을 이끄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서남표 총장님, 사과하십시오. 총장님의 의지는 많은 변화를 만들었고, 그 의지는 결국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카이스트의 누구든지 좋은 모교를 만들고자 노력하지만, 총장님의 교육 철학은 우리를 숨 막히는 막다른 길로 몰아갔습니다. 총장님의 잘못에 대해 상처받은 그들, 학우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서남표 총장님, 비민주적인 카이스트의 원규를 개정하십시오.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 아래 그들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카이스트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겠습니다. 한국 과학의 미래를 밝혀나갈 사람이자, 후학을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카이스트 학생을 학교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에는 언제부터인가 그치지 않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개교 이래 초유의 비상학생총회는 우리 학우들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스무 살의 치기가 아니라, 한국 교육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을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 KAIST 문제의 현황 및 원인

- 올 해 들어 무려 네 명의 KAIST 학부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음.
- 이러한 자살의 원인에 대해 아무도 단정할 수 없지만, KAIST 학생들이 압박을 느끼는 수많은 원인들 중 가장 큰 부분은 KAIST의 지나친 경쟁 위주의 학업 부담이고, 이는 서남표 총장의 경쟁 위주의 교육철학에 기인함.
- 징벌적 차등등록금 제도로 대표되는 서남표 총장의 경쟁 위주의 교육철학은 학점 경쟁을 연간 최대 1575만원에 이르는 수업료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제도의 피로감 및 부당함을 논하고 있음.
- 학교 당국에서 3월까지 내놓은 제도들은 주로 자살 방지 대책(상담센터 확충 등)에 국한되고 있음.
- 또한 네 명의 학생들의 죽음으로 인해 KAIST 내외에서도 서남표 총장의 정책 및 교육철학 전반에 대한 성찰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예 : 전면 영어강의제도 등을 포함한 수많은 제도 또한 학생 및 교수 사회 전반에서 논란을 가중시킴.)
- 서남표 총장은 그 동안 여러 학생들의 자살에 대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왔으나, (예 : 4월 4일 서남표 총장의 편지 등) 대내외적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차등등록금 제도등을 폐지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힘.(4월 7일 기자회견, 4월 12일 국회 출석 등.)
- 당초 4월 18일로 예정된 서남표 총장의 국회 출석은 4월 12일로 앞당겨지고, 이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개선 및 서남표 총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음.

- KAIST 교수협의회도 4월 11일 서남표 총장에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하고, 4월 13일 오후 1시에 교수협의회의 온라인 총투표 결과를 공개하기로 함.

3. KAIST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

-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4월 13일(오늘) 오후 7시에 비상학생총회를 통해 KAIST 학부생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집결할 예정이고, 아래 의견은 지금까지 학생 대다수의 의견을 취합한 바임.
- KAIST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차등 등록금 등을 비롯한 지나친 경쟁 위주이고, 안전망이 사라진 서남표 총장의 제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임. (예 : 2010년 3월 총투표에서 차등 수업료 관련 개선 의견에 무려 95%가 찬성 입장을 보임.(투표율 : 68%))
-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소통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4월 8일의 총장 간담회 또한 서남표 총장의 일방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더욱이 자살 방지를 위한 상담센터 확대 등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 더욱이 차등 등록금 제도등을 폐지하겠다는 서남표 총장의 입장에 대해, 서남표 총장의 개혁안이 전반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개선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일부에서는 서남표 총장의 거취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4. 결론

- 서남표 총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개혁안이 부작용을 일으켰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개혁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해결하고자 하려는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
- 더욱이 이러한 개혁안의 적용 대상인 KAIST 구성원들에 대한 공식 사과입장 표명이 필요하고 이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함.
- KAIST 구성원들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KAIST 구성원들이 결집하여(교수협의회, 학부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문제 해결을 꾀해야 함.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이러한 의견을 KAIST 역사상 초유의 비상학생총회를 통해 의견을 결집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예정임.
- 향후 서남표 총장의 사례 등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학생 대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와 의결권을 보장. 서남표 총장은 이러한 장치가 필요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